

“특별자치도로 전북 부흥 열 것”

민주 이재명 대선 후보 전북 찾아 집중 유세

“대한민국의 한 축으로 자치권·재정역량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만금·전북을 아우르는 특별자치도 지정과 영·호남을 묶은 남부 수도권 지원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도민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19일 익산역과 전북대학교 구 정문의 유세현장을 찾아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로 전북 부흥시대를 열겠다”면서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익산역을 찾은 이 후보는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수도권 주민들도 고통받고 있다”면서 남부 수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남부 수도권을 새롭게 만들겠다”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중심의 한 극과 전북 이하 영남과 호남이 합쳐진 남부 수도권을 또 하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남부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국가 투자를 하고 재정권을 확대해 주고, 자치권을 늘려 싱가포르처럼 독립된 경제 단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익산역 앞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전북도 호남의 한 부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일부로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같은 날 오후는 젊음의 거리로 통하는 전북대 구 정문 앞을 찾아 시민들과 마주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정책 때문에 너무 어렵다”면서 “이 집중에 문제를 완화해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북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집중 투자를 해서 전북과 전남 광주 주민들도 수도권에 근접하는 새로운 시대로 성장발전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도 만들어 자율권과 재정적 능력을 확대해서 확실하게 경제발전을 이뤄내겠다”면서 “전북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직장을 구하고 생활하고 아

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새만금·전북 특별자치도의 부흥시대를 열고 전주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여러분의 자긍심을 더 높일 것”이라며 “전북이 호남의 일부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 한 축으로 독자적인 경제발전 성장기회를 맞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민주정부 재창출 위해 진안군민의 힘으로”

안호영 의원, 진안서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도 내 시군을 순회하면서 연일 대선 선거운동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아침 진안군 진안읍 군민회관 로터리에서 지역위원회 당원·출마예정자 등과 함께 출근 인사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이날 유세차에 올라 ‘인삼 스마트팜 혁신센터 건립’ 등 이재명 후보의 진안군 공약을 소개하고, 진안군 발전과 군민의 민생 개선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18일 아침 진안군 진안읍 군민회관 로터리에서 지역위원회 당원·출마예정자 등과 함께 출근 인사를 진행했다.

또한 “진안군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돌아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억한다”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 진

안군민의 응징된 힘으로 그 이상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민주 도당 노인위 “윤석열 정치보복 망언 규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위원장 정영배)는 지난 1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치보복 망언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정영배 노인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치보복 망언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이 땅에 정치보복을 끝내고 국민대통합을 실현할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공화국을 내세워 전 정부에 대한 수사 및 정치보복을 공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과거 수사와 탄압의 시대로 회귀하려 함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보복식의 구태 정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고결한 뜻을 퇴보시킬 뿐만 아니라 대의 정치에 대한 전국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위원회는 지난 1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치보복 망언 규탄 대회를 진행했다.

적인 신뢰를 망가뜨리는 가장 불결한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도당 노인위원회는 규탄대회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망언 철회 요청과 함께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현장의정활동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김은영 의원)가 지난 18일 공유재(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위원회는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예정지를 시작으로 소공인들의 편의와 경쟁력 증대를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예정지,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를 연달아 방문해 현장 확인 및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했다.



김은영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현장활동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안전심사에 임하겠다고, 지역 상공인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용

객 편리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지적한 의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현장활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남북교류 민간위탁 근거 마련

김이재·문승우 도의원, 조례 개정…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전북도의 회 김이재·문승우 의원이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북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이재 도의원



문승우 도의원

개정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 2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정으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되고 통일부 남북교류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민간위탁 사업이 지자체 직접 사업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라

북도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협력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이재 의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문승우 의원은 “비시도와 차별화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고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민주, 예결위서 14조원 규모 추경 단독 처리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골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2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정부안 원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총 14조원 규모의 안이다.

회의는 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추경안 및 기

금운영계획변경안 등 총 3개의 안건은 약 7분 만에 기습 처리됐다.

앞서 여야는 전날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강대강 대치 끝에 파행에 이른 바 있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도 정부가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을 거부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부안대로 3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 지원까지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000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 대통령 지지율 7주 연속 40%대

한국갤럽 여론조사

서울·40대에서 큰 상승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주 연속 40%대를 유지한 것으로 지난 18일 나타났다. 서울과 40대 지지율의 급증이 두드러졌다.

한국갤럽 2월3주차(2월15~1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0%, 부정평가는 58%로 집계됐다. ‘어느 쪽도 아닌’은 2%.

‘모름·응답거절’ 응답은 4%였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새해 첫 발표된 1월1주차 조사에서 41%를 기록한 뒤 2월3주차까지 7주 연속 40~42%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미크론발 확진자가 10만명 인파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대선 전까지 이같은 흐름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연령별 긍정·부정률은 ▲18~29세(20대) 긍정25%·부정63% ▲30대 41%·53% ▲40대 60%·38% ▲50대 46%·50% ▲60대 32%·65% ▲70대 이상 30%·54%로 조사됐다.

특히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으로 평가되는 40대 지지율은 지난주(53%) 대비 7% 포인트가 올라 60%로 집계됐다. 새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앞서 40대 지지율은 1월1주차 조사 52%로 시작해 1월3주차 55%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51~55% 수준을 유지해 왔다.

지역별 긍정·부정률은 ▲서울 긍정 39%·부정56% ▲인천·경기 40%·55% ▲대전·세종·충청 39%·53% ▲광주·전라 70%·21% ▲대구·경북 20%·69% ▲부산·울산·경남 39%·55%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경우 지난주(34%) 대비 5% 포인트가 올라 39%를 기록하면서 다

른 지역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새해 들어 서울 지지율은 1월1주차 42%·1월2주차 41%를 기록한 뒤 1월3주차부터 2월2주차까지 34%로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다시 1월 초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올랐던 주택 가격이 급감 확대, 금리 인상 등을 바탕으로 하향 안정이 가속화되는 등 정책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긍정 평가의 이유로 ‘코로나19 대처’(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교·국제관계 20%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8% ▲안정감·나라가 조율함 5% ▲전반적으로 잘한다 4% ▲경제 정책 4% ▲복지 확대 3% ▲북한 관계 3%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는 ▲부동산 정책 23% ▲코로나19 대처 미흡 12%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9%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8% ▲북한 관계 7% ▲공정하지 못한·내로남불 4% ▲외교 문제 4% ▲북단적·일방적·편파적 3%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3% ▲대선개입 2% 순으로 지적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2%가 긍정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 90%가 부정 평가했다. 무당층도 부정률(54%)이 긍정률(30%)보다 더 높았다. 정치적 성향별 긍정률은 진보층 73%, 중도층 40%, 보수층 17%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유선전화 RDD 10% 포함)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